

불안한 '화약고'... 안전 컨트롤타워·노후설비 교체 시급

■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본 전남지역 산단 안전문제

화약고. 여수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등에서 치명적인 원료 유출·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불은 수석이다.

여수산단 뿐 아니다. 광양지역도 마찬가지다. 광양제철소를 비롯, 1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입에도, 비상 상황 시 안전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등을 갖추지 않아 체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끊이지 않는 사고=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 집계한 최근 5년(2015년~2019년 11월) 간 광양지역에서는 모두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광양지역의 경우 지난 2015년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 6건(2016년)→8건(2017년)→5건(2018년)→4건(2019년)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4일 폭발 사고 이외에도 지난 6월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다쳐 병원에서 숨졌다. 폭발사고 한 달 뒤인 7월, 또다시 불꽃과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정전사고가 나면서 지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급기야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도 당시 성명을 내고 "회사는 안전 관련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에만 의존했고 최고 책임자인 최정우 회장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중대 재해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 실효성 있는 대책은? = 사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치는 데도, 적극적인 해결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단의 노후화된 시설·부실한 안전 대책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5년 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구성, 운영중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대부분으로 자칫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관대가 형성되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전남도·여수시 등 9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에

광양제철 최근 5년 26건 안전사고
여수산단 화학공장 잇단 사망사고
사고때만 떠들썩 근본 대책 안나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럼에도 일원화된 컨트롤타워 기능에도, 권한과 역할이 미흡해 사고 발생시 각각 개별법에 따라 사고처리 및 사후관리가 이뤄지면서 전남도의회가 지난 2월 권한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1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입에도, 이 같은 합동방재센터나 총괄컨트롤타워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예방하기 위해 방재훈련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들의 설비개선·투자를 앞당기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업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안전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해온 여수와 달리,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제외하면 협력업체들이 대부분이라 현장 작업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역산업계의 전언이다.

대책 마련에도 미온적인 분위기가.

전남도만 하더라도 사회재난과를 두고 안전점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산단 분야는 경제에너지국 소관이라는 입장인데다, 해당 부서도 산단 사고 등은 소방본부가 처리하고 있는 식으로 협업이나 종합적 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국가산단 사고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안전을 담보할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개선은 아예 안건조차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관련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노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왼쪽부터)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과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또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제철소 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 설비로 조업에 영향이 없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은 소방서 등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중일 정상 북미대화 조속재개 노력키로 인적·문화·스포츠 교류 '10年 비전' 채택

文대통령·리커창·아베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정착 3국 공동이익 부합"

한중일 3국 정상은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쓰촨(四川)성 청두의 세계성 국제회의센터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3국 정상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가 2년 반 만에 열린 작년 제7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만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

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을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의 정례화·제도화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3국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 대기오염 방지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협력 강화 ▲ 개방적·호혜적 무역 환경 조성 ▲ 과학기술협력 확대 추진 ▲ 역내 연계 및 인프라 협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함께 노력해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중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로서 3국 협력의 비전과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문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오늘 3국이 채택하게 될 3국 협력 비전은 3국이 함께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 71%, 305조 상반기 배정... 경기 활성화 뒷받침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해 재정을 서둘러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 가 이날 밝혔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512조3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이 427조1000억원이고 이 중에서 305조원(71.4%)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내년 배정 비율 71.4%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71.6%) 이후 7년 만에 최고다.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

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총계 기준 상반기 배정률은 SOC 예산이 74.3%(32조4000억원), R&D 예산이 79.3%(17조8000억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82.2%(5조9000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9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9조6000억원 가운데 '생활 SOC' 예산이 5조

5000억원이고, 일자리 예산과 일반 SOC 예산이 합쳐서 4조원이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예산부수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날 예산 배정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일련의 예산 집행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최소한 1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더이상 예산배정계획을 늦출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이 씌워져 보이기 같은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